시민과 개

박용수 강원대 신방과 교수

다섯 분의 중재위원들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 푹신한 소파이긴해도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은 어느 신문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다. 시민은 언론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기사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때로는 검사와도 같이 피신청인을 질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와도 같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 주장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인격권, 존엄권, 행복추구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음을 본다.
모 신문을 대표해서 나온 부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칼과 방패로 삼아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기사는 취재과정에서 특정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엄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임을 강변하면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다. 어떤 경우는 녹취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못해 먹겠다」는 표정이다. 이쯤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져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네가 그르니 내가 옳으니 티격 태격 공방이 치열해지기 일쑤다.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랬다」 중재위원들은 서둘러 열전을 냉전으로 전환시킨다. 이 때부터 「사실」과 「진실」사이의 거리를 좁혀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중재위원들의 고뇌는 시작된다. 이성적인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은 아무 것도 아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믿었던 언론사라는 조직에 겁없이 맞서는 개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인 것이다. 바람직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제도언론 상황 하에서는 시민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오로지 복종과 순응의 신민(臣民)만 있었다. 이들 신민의 삶의 조건과 기회는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제한 당하고 억압적 환경으로부터 탈출구를 선택할 기회마저 사회적으로 차단되었던 것이다.
권력화한 제도언론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계도대상, 심하게 말하면 조작대상으로 삼는 오만함으로 일관했다. 개인은 명백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감히 언론에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위에 달걀 던지기일 뿐이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위안 삼으며 체념해야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원로 언론학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언론은 국민보다 권력쪽에 더 가깝고, 소수보다 다수쪽을 더 편들며, 비판보다 지지쪽으로 기울면서……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뉴스는 알리지 않고, 그러다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회적 거리만 있으면 센세이셔널리즘의 온갖 수법을 다 구사하여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밟아버리는, 도무지 참된 언론인답지 않은 그러한 보기 흉한 모습으로나 국민의 눈에 비치지 않았는지 저으기 걱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일관되게 스스로를 제 4 부로서 대중의 대변자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수학자… 운운, 교과서에서나 있을 법한 명분을 앞세운 채 무릇 힘없는 사람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분명 오보를 했거나 과장 보도했음을 언론 스스로 알면서도 정정은커녕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어물정 넘어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갔다. 이런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본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6·29 선언으로 민주화 격랑이 시작된 1987 년에서 95 년까지 9 년 동안 중재신청된 언론의 침해건수 가운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전체 신청건수의 77%에 이르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아직도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얼마나 둔감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흔히들 언론을 일컬어 파수견이라 할 때, 주민(시민)을 섬기고 보호하기는커녕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을 오히려 물어뜯는 못된 개 (언론)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가.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다. 사회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눌린 채로 하라면 하는 주눅들은 사람도, 물어뜯어도 날 잡아잡수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밸 빠진 사람도 없다. 아무리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리바이어던(Reviathan)일지라도 목을 세우고 잘못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질타하는 시민이 등장한 것이다.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적극적 존재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다.

무대 아래 객석에 앉아 있는 국민들을 향해 무대 위에서 각본에 따라 보여주던 언론 쇼도 끝났다. 「무관의 제왕」 (?)이던 언론이 이제는 자신의 계도대상이 던 무지몽매한(?) 대중을 향해 「더 이상 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윤리 헌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신문사 스티커를 붙인 차가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대강 봐주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알만한 사람이 왜 위반했느냐」라면서 딱지를 떼는 세상이 됐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기자들로서야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했지만… 언론인들은 독자들보다 지적 문화적 수준에서도 더이상 우월한 입장에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신문지면이 기자들의 독점적 「훈계공간」이 아니고 독자와 함께 구성하는 「토론의 광장」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언론인은 더 이상 대중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떠받들지도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 엄격한 윤리의식을 지닌 생활인이기를 요구받고 있다.

일제 하에서 펜으로 항거하던 지사형의 언론인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투사형 언론인도, 3·4 공화국에서의 순응적 언론인도, 5·6 공의 이언제언시대 살아남은 귀족형 언론인도 이제는 박물관의 주인공으로나 남게 되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인상은 역시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직업인일 것이다. 그렇지 못한 언론인은 무능한 공무원이나 부패한 경찰관처럼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언론사 조직 내에서 조차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시대 시민사회가 바라는 진정한 언론은 사람을 무는 못된 개가 아니라 민감한 눈과 귀로 바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정화하게 알려주는 파수견, 우수마발과 같은 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엮어내는 머크레이커(muckraker)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에 접근하려는 직업적 전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